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1.31.(수) 조간	배포	2024.1.30.(화)	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1국 검사정보분석팀	책임자	국 장	김진석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7020)

**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
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.**

주요내용

- **(개요)**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.
 - 이에, 금융감독원은 '23.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.
- **(검사결과)**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(잠정)되었습니다.
 -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,
 -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, 최소 이연기간(3년) 및 이연비율(40%)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.
 -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.
- **(향후 계획)**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,
 -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·환수·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I. 검사실시 배경

- 최근 고금리 기조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 -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였으며,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.
-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에도
 - 일부 증권사는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주의가 크게 우려되는 수준입니다.
 - 증권사의 이와 같은 성과보수 지급관행은 부동산 PF 등 고위험·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'23년 상반기에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(22사)에 대해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,
 - 점검 결과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확인을 위한 검사*를 실시하였습니다.

* [검사 대상] 17개 증권사(서면검사), [검사실시 기간] '23.11.13.~11.24.

(참고)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관련 규제 체계

- ☑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의 이연지급대상, 기간, 비율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, 그 외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

구분	내용
■ 대상 증권사	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,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
■ 지배구조	이사회 내 '보수위원회'를 설치,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·의결
■ 이연지급 대상	임원·금융투자업무담당자
■ 이연지급 기간	3년 이상 이연
■ 이연지급 비율	40% 이상 이연(초년도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배분액 초과 금지)

Ⅲ. 검사결과 주요내용 [잠정]

◆ 점검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,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 확인되는 등

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1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·방식 등 기준 미준수

-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(3년)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(40%)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.
-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었으며,
 -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(95억원)를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.

(참고) A증권사 지급기준 및 위반사례

☑ (지급기준)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~2.5억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, 잔액은 1~3년간 이연 지급(연도별 0.5억원,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연도 지급)

☑ (위반사항) A증권사는 최소 이연지급 기간·비율 등 위반

성과보수 (예시)	당해연도 지급	이연지급			위반사항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
1.6억원	1억원	0.5억원	0.1억원	-	최소 이연기간·비율 위반 ¹⁾
2.2억원	1억원	0.5억원	0.5억원	0.2억원	첫해 이연지급액 한도 위반 ²⁾

주 : 1) 성과보수를 2년 동안만 이연하고, 최소 이연비율보다 낮은 비율(37.5%)을 이연

2) 첫해 지급하는 성과보수 금액(0.5억원)이 이연기간 중 연평균 금액(0.4억원)을 초과

2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 지급

- 일부 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하였습니다.
-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(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%)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하였고,
-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(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%)에 대하여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하였습니다.
-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하였습니다.

3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임의 적용

-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(부서) 단위로만 구분하여 이연지급함에 따라
 -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.
- 또한,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(예 : 1억원)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*하였습니다.

* 이에 따라,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%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 초래

-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입니다.

4 | 기타 불합리한 지급관행

-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함에도
 -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·비율(3년·40%)을 획일적으로 적용*하고 있습니다.

* 점검대상 17개 증권사중 11개사는 이연지급대상 전원에 대해서 3년간 이연지급 (나머지 6개사는 임원에 한해서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이연지급)

IV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.
 -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, 장기성장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
- 이와 함께, 성과보수의 이연·환수·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